장흥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10일째 행방 묘연

안심 못할 전자발찌…지역민들 불안 가중

서울 전자발찌 살해범 충격 속
여전히 행방 못 찾아 전전긍긍
도주사실도 뒤늦게 주민에 알려
광주·전남 5년동안 70건 훼손
성범죄자 재범 우려에 대책 시급

장흥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50대 남성이 10일째 행방이 묘연, 지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알려진데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조기 검거를 하지 못해 2차 살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군(郡) 단위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들을 감시·감독할 보호관찰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주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점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신감을 갖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발찌 끊고 도주, 10일째 못 잡아=30일 법무부와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A(50)씨는 지난 21일 장흥군 장흥급 주거지에서 18㎞ 옮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야산으로 달아나 여태껏 검거되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경우 활동 반경을 거주지 2㎞ 이내로 제한하는데, 즉각적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를 끊을 때까지 활동 반경을 벗어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나온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후 장흥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 추적에 나섰지만 도주 경로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달아난 뒤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가 A씨 도주 이후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단지를 배포해 늑장 공지로 인한 불만도 터져나온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고 해서 일대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경찰이 요청해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현재 경찰을 통해 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전자발찌 훼손 사례, 줄이어=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는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전자장치 위반사례는 70건에 이른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고 잠적했을 때 추적하는 과정에 보완해야할 점이 있어 법무부와 경찰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스템적인 보완 뿐 아니라 훼손한 데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발찌 훼손 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이지만 평균 선고형량은 징역 9개월, 벌금은 4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30일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고작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거나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 7월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847명인데,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차별화한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광주·전남지역 보호관찰소에서 감독 중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석방 포함)도 광주보호관찰소 194명, 목포지소 50명, 해남지소 27명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추석 열차표 예매 어떡하나

방역대책 발표 늦어져 시민 혼란

정부의 추석 명절 방역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추석 귀성열차를 예매하려던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1년 추석 승차권예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반면, 방역당국의 추석 방역대책은 애초 30일로 잡혔다가 다음달 3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 대규모 취소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레일측은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절반만 예매키로 했다.

30일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추석연휴 기간(9월 17~22일) 코레일 열차 예약이 시작되지만 절반인 창측 좌석만 우선예매가 가능하다. 내측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발표된 다음달 3일 이후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31일부터 코레일 열차 예약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지난 25일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지난 29일 "추석 연휴기간 중 가족 간 만남을 허용할 지 의견을 들으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오는 9월 3일 결과를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4차 대유행이 잦아들 기미가 보인다면 추석 가족 방문을 허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 때문에 일단 예매를 했다가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 취소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자칫 방역 대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규모 예매 취소도 일어날 가능성이 나온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추석 명절, 가족과 모임을 일부라도 허용할 지, 아닌지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서 다소 늦게 발표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승옥 강진군수 자택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강진군청도

경찰이 강진군청과 이승옥 강진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강진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30일 전남경찰과 강진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1대는 이날 강진군청 군수실과 군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군수와 측근 인사 4명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지역 유력 인사 수백명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강진 가우도(駕牛島) 관광단지 조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공직자가 인근 지역 부동산에 대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진군청을 두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강진군청 비서실 직원과 지역일간지 기자 B씨 등이 사전에 취득한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우리마을 아동 우리가 지킨다 30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동네 아동수호대 발대식'에서 대원들이 '아동이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재개발 사업 '지분 쪼개기'

공무원·조합장 등 검찰 송치

지산 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고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한 광주 동구청 현직 공무원과 학동 4구역 조합장과 가족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등 1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께 광주시 동구 지산 1구역 재개발사업 예정지 내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원룸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 1개에서 다수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명 '지분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지분쪼개기란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조합원 수를 늘려 분양권을 확보하는 수법이다.

해당 원룸 세대별 가격은 6000만~8000만원이지만 지산1구역 재개발지에 있는 기존 주택은 2억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적발한 14명 중에는 1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아들·딸,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A씨,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산1동 일대 3만1065.25㎡ 터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8개 동 473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이 불구속으로 넘긴 사기 미수 피의자

검사의 끈질긴 수사로 보이스피싱 밝혀내

전국서 관련 자료 취합 파헤쳐

경찰이 불구속으로 넘긴 사기미수 혐의 피의자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한 검찰이 전국 6개 검찰청의 관련 사건을 뒤지고 파헤치는 전면적 재수사 끝에 보이스피싱 총책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 검사의 끈질긴 의지가 피해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넘겨진 사기 미수 사건 속에 가려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전모를 밝혀내는 계기가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30일 보이스피싱 관리책 A(28)씨 등 12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리책 2명과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2명 등 4명은 구속했고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10월 중국 장쑤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이후 국내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9000만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 한 명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의 진술상 모순점을 발견, 전국 6개 검찰청에 흩어져 있던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을 모두 취합한 뒤 재수사에 들어갔다.

담당 사건을 맡았던 전수진 검사는 재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공범 9명의 존재와 신원을 특정해 가담 정도를 고려해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환수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국가 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2934	1	광산구 수등로205, 202동 15층1504호 [신가동,신가2차리젠시빌아파트] 84.0624㎡	아파트	231,000,000 231,000,000	
2021타경 3456	1	북구 비엔날레로51, 1동 6층607호 [운암동,동일아파트] 84.93㎡	아파트	139,000,000 139,000,000	
2021타경 61896	1	북구 양산택지소로20, 107동 18층1803호 [본촌동,양산지구현진에버빌] 111.94㎡	아파트	471,000,000 471,000,000	2020타경14046[중복]
2021타경 67993	1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440-12, 103동 2층204호 [주공아파트] 51.88㎡	아파트	112,000,000 112,000,000	2021타경4350[중복]
2021타경 68538	1	광산구 신창로161번길34, 319동 2층206호 [신창동,신창3차부영사랑으로] 59.7480㎡	아파트	172,000,000 172,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3555	1	광산구 도산동 733 397㎡[공유자신봉선지분10/405전부]	대	7,739,940 7,739,9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태양열설비,수목매각제외.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광산구 송도로162번길 38-26 1호 주택 56.22㎡ 부속 주택 62.81㎡[공유자신봉선지분2/81[70/2835]전부]	단독주택		
2021타경 64758	1	곡성군 삼기면 청계리 175 357㎡	대	20,294,500 20,294,500	일괄매각.건물중부속건물[목조스레트지붕단층헛간39.48㎡]은소재불명[멸실로추정됨]
		곡성군 삼기면 봉현길 42 단층47.15㎡ 부속 단층 헛간 39.48㎡ 제시외 통로 등 55㎡[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2021타경 67078	1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2-4 547㎡	대	390,390,400 390,390,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컨테이너및저온고는제외[목록2창고내에소재].자연석및관상수[목록3소재],태양광설비포함[목록2주택지붕설치되어있음]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885 단층189.18㎡ 부속 단층창고 65.25㎡ 제시외 창고 등 63.5㎡,태양광설비 1식	단독주택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2-5 991㎡	창고용지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885 단층 축사 189.48㎡ 부속 단층 퇴비사 82㎡ 단층 소사육시설 145.2㎡ 제시외 가축 49㎡	단독주택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3968	1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105-1 2029㎡	전	171,948,000 171,948,000	일괄매각.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수목포함
		동소 106 469㎡[대지일부타인이점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나정확한지적경계는측량필요할것으로보임[감정평가서참조]]	대		
2021타경 4053	1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산47 7964㎡	임야	37,430,800 37,430,800	연고미상분묘수기소재
	2	동소 산47-2 139㎡	임야	500,400 500,400	현황도로임
2021타경 66822	1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39 24624㎡	임야	238,852,800 238,852,800	
2021타경 66976	1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109 473㎡[공유자정준하지분1/13,공유자정준석지분1/13.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수목제외[감정평가서참조]]	대	13,299,062 13,171,37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1타경 67603	1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97 19835㎡[채무자박찬웅지분1/3전부]	임야	7,933,992 7,933,992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1타경 68071	1	남구 월성동 87-3 681㎡ 제시외 소나무 28주,소형관정 1식[제시외건물포함]	전	219,167,290 219,167,290	일괄매각.수목및관정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컨테이너매각제외[감정평가서참조]
		동소 87-4 911㎡ 제시외 소나무 3주[물건번호1:공유자지분전부[조주영지분3/7,김지애지분2/7,김충록지분2/7]]	전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1타경 67504	1	서구 죽봉대로78번길10, 11층1111호 [농성동,골든힐스타워] 22.2300㎡	근린시설	67,000,000 67,000,000	
[자동차,중기]					
2021타경 4497	1	사용본거지:전남 화순군 백아면 노치길 149 [노치리] 등록번호:84도2688 차명:포터II 윙바디 연식:2015	자동차	13,000,000 13,000,000	보관장소:광산구상원길314-16
[기타]					
2021타경 3043	1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79-1 4948㎡ 제시외 폐유정제시설 외 3식	공장용지	919,078,130 919,078,13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실험실[3-6]은'산33-6'타지상소재.정원석및수목포함[목록1,2소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
		동소 579-14 1092㎡	도로		
		영광군 영광읍 군서로 394 가동호 단층공장 322.27㎡ 제시외 창고 등 294.7㎡	기계기구		
		동소 나동호 단층공장 47.94㎡[물건번호1: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은별지기재와같음]	기계기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9. 14.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9. 23.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3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